

광주살이, 팍팍하다 4집 중 1집 “생계 곤란”

2025 광주 사회지표 조사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28.8%

“생계 어렵다” 응답 비율은 감소

고교생 월평균 교육비 104만원

정주 의향 68.2%로 높아졌지만

교통·주차 시설 불만은 여전

출산 정책은 ‘양육비 지원’ 1순위

경기 침체 장기화로 광주시민들의 지갑 사정이 악어지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자녀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고등학생 기준 100만원을 돌파하는 등 가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계속 살고 싶다는 ‘정주 의향’은 상승해 눈길을 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변화를 담은 ‘2025 광주 사회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21일까지 관내 표본 4905가구(만 15세 이상 가구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표에 따르면 시민들의 경제적 상황은 2년 전보다 눈에 띄게 악화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비율은 28.8%로 직전 조사(24.8%) 대비 4.0%p 증가했다. 반면 ‘400~600만원 미만’인 중간 소득층 비율은 24.1%에서 20.1%로 4.0%p 감소했다.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비율이 24.2%를 기록해 이전(40.3%)보다 16.1%p 감소했다. 시민 4명 중 1명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의미다.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주범 중 하나는 지솟는 사교육비 등 교육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고등학생이 104만 6000원으로 집계돼 이전(83만 4000원)보다 21만 2000원이나 뛰었다.

중학생은 74만 5000원(이전 65만 7000원), 초등학생은 62만 2000원(이전 61만 2000원)으로 조사돼 학령기가 올라갈수록 학부모의 허리가 휙는 구조가 뚜렷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교육비는

116만 4000원이었다.

반면 공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뒷걸음질쳤다.

거주 지역의 공교육 환경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0.2%에 그쳐 이전(31.7%)보다 소폭 하락했다. 시민들은 교육 환경 개선점으로 ‘학교 시설의 개·보수’(27.8%)와 ‘도서관 설립’(25.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거 환경과 관련해서는 긍·부정적인 신호가 교차했다.

광주에 10년 이상 계속 살겠다고 응답한 ‘정주 의향’은 68.2%를 기록해 이전(66.4%)보다 1.8%p 상승했다.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역시 50.6%로 과반을 넘기며 상승세(이전 44.2%)를 보였다. 그러나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비율은 59.2%로 2년 전(64.8%)보다 오히려 5.6%p 하락해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주거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만 요인으로는 ‘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서’(28.9%)와 ‘주차 시설이 부족해서’(16.9%)가 1, 2위를 차지해 고질적인 교통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이 바라는 정책 수요는 세대별로 확연히 같았다. 청년층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31.1%)이 꼽혔고 노인층은 ‘노인 복지시설 확충’(28.3%)을 가장 원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자녀 양육비 등 현금 지원’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자녀 출산비 지원’(19.6%)이나 ‘근로·취업 지원’(15.6%)보다 실질적인 양육 비용 보전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은 10점 만점에 6.37점으로 2년 전(6.43점)보다 0.06점 소폭 하락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지표는 시민들의 현재 삶과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나침반”이라며 “조사 결과를 시정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상표권 논란 … 어설픈 공공재산 관리 ▶6면

나성범 “올해는 보여주겠다” 명예회복 선언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경기도 광명동굴 ▶22면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청 교육감이 7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전남 대통합 성공과 교육혁신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도 행정통합 당사자로 나선다

강기정 시장·이정선 교육감 교육혁신 공동선언문 발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전략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관련기사 3면〉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 차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7일 오후 3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전남 대통합 성공과 교육혁신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해 양 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향후 통합특별시 출범 시 제기될 교육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선언에 따라 시교육청은 현재 가동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에 핵심 주체로 참여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통합 과정에서 선진형 초광역 교육 모델을 설계하고, 관련 법안 작성과 검토 과정에 주도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는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교육 분야의 목소리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은 교육청의 통합 참여와 역할을 구체화한 4가지 핵심 합의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시교육청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광주·전남 대통합에 적극 찬성하며, (가칭)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광주시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청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의 핵심 주체로 참여해 선진형 초광역 통합 모

델을 구축하는 데 앞장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셋째로 교육청은 교육 분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법안 작성 및 검토 과정을 주도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특별시(가칭)’ 출범이 시 대적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단순한 행정 구역 결합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혁신과 지역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방 소멸 위기와 현 정부의 국정 과제를 고려할 때 행정통합의 당위성은 충분히 확보됐다”며 “산적한 교육 관련 난제들을 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행정통합의 절반은 산업이고 나머지 절반은 교육이라고 할 만큼 시·도민의 관심이 지대하다”면서 “교육정과 밸을 맞추게 된 만큼 통합이 시·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암매장’ 이번엔 확인될까

광주 북구 효령동 야산서 행불자 유해 찾기 나서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행불자 유해를 찾기 위한 암매장 발굴 작업을 재개한다.

〈관련기사 2면〉

옛 광주교도소 발굴 작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해 담보 상태에 빠졌던 행불자 찾기 작업이 40여 년 만에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광주시 공고 제2026-0001호를 통해 북구 효령동 산 143번지 일원을 ‘5·18 암매장’ 발굴 지

원 사업 대상지’로 결정하고 분묘 개장 공고(1자)를 냈다. 공고 기간은 오는 4월 5일까지 3개월간이며, 이후 본격적인 시굴 조사에 들어간다.

시와 기념재단은 다수 주민의 증언과 계엄군의 작전범위, 동선을 대조해 효령저수지 인근 암산을 암매장 추정지로 분류했다. 이곳은 1980년 5·18 당시 공동묘지로 사용됐으며, 현재 130여 기의 분묘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와 재단은 묘역에 비석이 세워져 있거나 공고 기간 내에 후손 등 연고자가 확인되는 묘역은 발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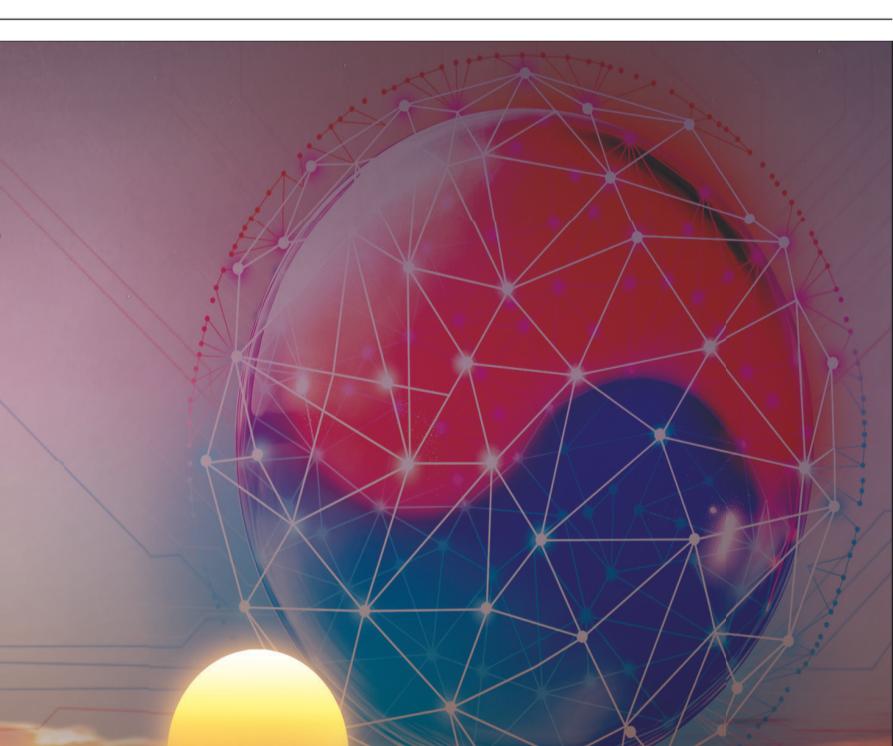
대신 공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연고가 확인되지 않는 무연고 분묘를 위주로 발굴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와 재단은 해당 분묘가 무연고 묘지로 최종 확인될 경우 유골을 수습하고, 전남대학교 법의학교실 등에 의해 행불자 신고 가족들의 DNA와 대조 작업을 별도로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발굴을 위해 당초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며 최종적으로 5000만원을 투입하며, 부족한 비용은 재단이 자체 예산을 더해 총당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I시대·5G·3D
균형성장으로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기업과 일자리로 고르게 성장합니다.
지방이 주인공, 대한민국이 더 강해집니다!



2026 병오년 붉은 말의 해
희망이 가득한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